

# 옥석가리기 시작... 대형사 위주로 재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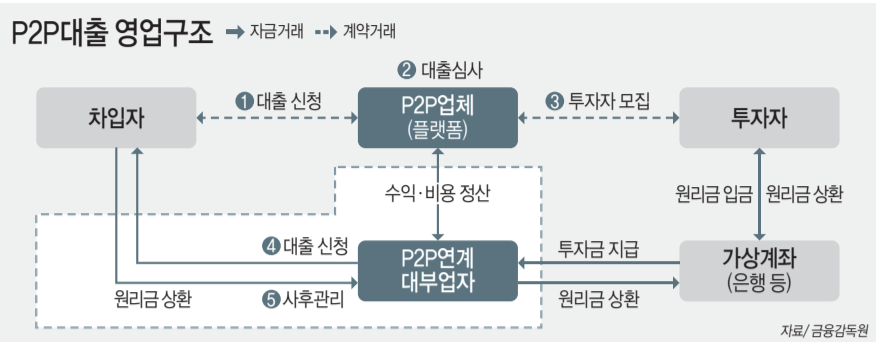
## P2P 가이드라인 개정

### 부동산대출 관련 공시의무 확대 거액운용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충원 불가피 소형업체만 '울상'

올해 사기 횡령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P2P금융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업체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P2P가이드라인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권안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개인 신용 업체 간, 대형-중소형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대출업체 공시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바빠진 쪽은 부동산 대출 업체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대출업체의 정



보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지난 9월 말 기준 193개사로 대출 잔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61개 회사는 PF·부동산 담보 대출 업체로 전체 대출 잔액 1조907억원 중 65.1%인 1245억원을 차지했다. 연체율도 신용대출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부동산대출 관련 공시의무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PF대출 공시항목 확대 ▲ 부동산 물건 존재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 부동산 P2P대출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등이다. 거액이 운용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대출전문업체 관계자는 “이

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시행사나 시공사, 법률관계 입증서류 등은 투자자들에게만 공시했던 부분이었는데 공통 공시항목에 들어가면서 플랫폼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었던 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 어렵다”고 토로했다.

#### ◆대형-중소형 업체 '희비'

대형 중소기업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고 업체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인력충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P2P실태조사에 따르면 P2P업체의 임직원 수는 평균 10.5명으로 대출담당 직원 수는 평균 3.7명이었다.

한 P2P업체 대표는 “회사 전체 임직원 수가 15명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시를 다 맞춰 실시하기엔 인원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출상환 원리금은 임의

로 관리해 왔는데, 외주를 두고 맡겨야 해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 같다. 내년이라고 해봐야 2-3주정도여서 예정된 상품 판매도 미룬 상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업체는 중소기업체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이다. P2P 대형업체로 손꼽히는 렌딧의 직원 수는 총 75명으로 플랫폼 운영관련 인원은 57명이다. 테라펀딩의 직원수도 100명에 달한다. P2P업체 평균 직원 수보다 7~10배 많은 수준이다. 렌딧관계자는 “대출심사업무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동화로 분류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공시의무는 무난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작을수록 투자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나 인력충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내년 법제화가 되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 반려동물 고령화시대, 관리방법은? 건강검진·전용사료·방한의류와 함께해요

“우리 행복이는 15년 동안 잘살다가 지난 해에 저 세상으로 갔는데, 애는 눈도 초롱초롱한 게 더 오래 살겠네요.”

반려동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우는 동물’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면서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최근 수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반려동물 수명도 늘어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기간은 평균 8.9년이며 양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의 연령도 높아져 반려견의 10.6%가 노령견의 기준인 10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펫팸족(Pet+Family)’들의 관심이 점차 노령견, 노령묘 시장으로 이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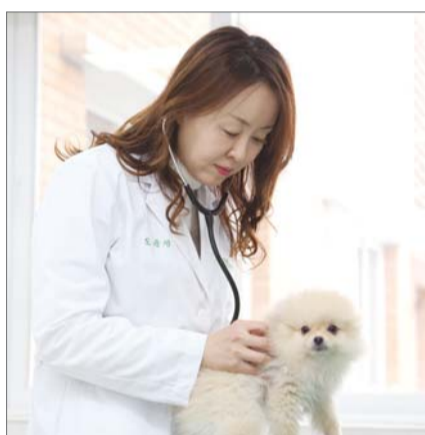
최근에는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보호자도 크게 늘었다.

노령견의 경우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여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검사를 진행해보면 오래 전부터 신체 내에서 특정 변화가 진행돼 병적인 상태로 발전, 내원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다..

생애전환기부터는 특정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표로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보통 강아지의 1년은 사람의 7년정도이기 때문에 7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심할 경우 인지기능 장애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슬레 퓨리나는 7세 이상 노령견의 인



반려견 비만검사 /농촌진흥청

지능력 개선을 위한 ‘프로플랜 브라이트 마인드’를 출시해 반려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프로플랜 브라이트 마인드(가운데 사진)’는 네슬레의 혁신적인 영양 배합으로 정제된 식물성 오일인 MCT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7세 이상 반려견에게 30일 이상 출 경우, 반려견의 주의력 향상과 총명함을 증진하는데 뛰어난 도움을 준다. 또한, 천연 항산화제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네슬레 퓨리나 관계자는 “기존 국내 노령견 사료 대부분은 치아나 관절 건강 등 신체 기능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네슬레 퓨리나의 프로플랜 브라이트 마인드는 국내 유일 노령견의 인지능력 개선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사람에 비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월동준비에 신경써야 한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생각한 영양제는 물론, 보온제품과 패션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11월 12일부터 12월 11일)반려동물 방한용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고양이 침낭



▶강아지 방한의류▶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전국 최하위’

### 0.23%... 전국 평균 3분의 1수준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4조원 늘어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허울 좋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평균 0.23%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0.6%)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행정활동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재정분야에서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위원회가 검토·심사한다. 시민 투표로 사업을 선정하고, 시장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지난 2013년 0.28%에서 2014년 0.22%로 감소했다. 2015년 0.23%로 전년도에 비해 0.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01%포인트 소폭 증가했다가 2016년 0.22%, 2017년 0.21%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의 지난해 예산이 32조원이고,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670억원이다”며 “전체 예산이 시의 절반을 조금 넘는 충남의 경우 2017년 총 예산이 12조원,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이 2500억원으로 서울의 3.7배였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재정규모가 반박에 안 되는 다른 시·도보다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작은 것은 시장의 의지가 더 부족하기 때문인 거냐”며 “지난해 기준으로 시보다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낮은 곳은 대구, 광주, 대전 세 곳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타 광역단체와 비교한 결과 서울

시의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2014년 팔찌에서 3번째, 2015~2017년 뒤에서 4번째였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주민참여예산 시행 방법, 산정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시는 주민참여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647억원으로 올해(592억5000만원)보다 54억5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재정은 31조8141억원에서 35조7843억원으로 약 4조원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사회적금융, 절차 준수하면 부실나도 은행원 면책

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해주거나 투자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미래 가치를 감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립 대출이나 투자가 부실이 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준수했다면 면책을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사회적금융의 방법으로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예시로 들었다.

지분 투자는 직접·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에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직접 투자는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하더라도 대상 기업으로부터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신 심사 시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면서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를 실시해 여신 취급 여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l@